

## 경남도, 가뭄대책과 농정 혁신·농수산물 수출산업화에 드라이버

- 한경호 권한대행, 15일 간부회의에서 “가뭄·농정혁신과 농수산물 수출산업화·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소방학교 승격·일자리안정자금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고강도 대책 지시”

한경호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0분 동안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당면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꼼꼼하게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가뭄대책, 농정업무의 일대혁신과 농수산물의 수출산업화,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소방학교 승격, FDA 지정해역 관리, 일자리안정자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3일 경남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내용들의 후속조치 등 현안사항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한 대행은 먼저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겨울 가뭄이 만만치 않다.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몇 개월 장기예보를 보아도 큰 비가 올 것 같지 않다”며, “생활·농업·공업용수별로 대책을 마련하라. 필요하다면 범도민적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도 해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가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경남의 강수량은 823.6mm로 평년(1430.6mm)의 57.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수지 저수율도 60.4%로 평년의 81.6%에 불과하고, 남강댐과 밀양댐, 합천댐 등 다목적댐 저수율도 20%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2016년도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농정업무의 일대혁신과 농수산물의 수출산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은 먼저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의 혁신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농업기술원의 기능이 수십년 동안 연구와 지도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농산물 수요예측과 품목별 생산량 조정,

유통, 가축질병 예방 등 시대변화에 따라 농기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농업기술원의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 생산조정·관측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농어가의 소득향상이나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등락 방지를 위해서라도 농수산물의 수출산업화가 절실하다. 1월 중으로 농수산물 수출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하겠다.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이 함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남무역의 수출지원 기능강화도 덧붙여 지시했다. 경남도의 지난해 수출액은 목표액인 17억불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소방학교 승격’에도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갈수록 소방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경남소방교육훈련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소방학교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의령군에 있는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은 부지면적 65,660㎡, 건축연면적 4,236㎡ 규모로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방학교로 승격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과 국고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점검과 관련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의 굴이 2016년 미국에만 1천 4백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등 수산물 최대 수출품이다. 그래서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FDA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로 문제가 되는 노로 바이러스는 분뇨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바다공중화장실과 분뇨수거선 운영 등 해양수산국과 환경산림국이 합동으로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남에는 거제~한산만, 자란~사랑, 산양해역 등 5개 해역 25,849ha의 FDA 지정해역이 있으며, 이는 전국 총 면적의 75%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태분석과 대안 마련과 체계적인 홍보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홍보도 미흡하다. 중앙부처의 일이라고 미루거나 도가 단순히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책을 마련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도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

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등이 대상이다.

또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에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업무를 더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의 위치부터 도 본청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문화재청, 경북도와 함께 3개 고분군(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단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다. 한 대행의 지시에 따라 1월 중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9명의 추진단이 도청에서 근무를 하게 될 계획이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밀양댐과 통영의 수산가공업체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한 대행는 “국무총리께서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원과 통영 패류 양식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500억원 지원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비사업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실 보도지원담당 이종하 사무관(055-211-2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